

# 2019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간 부 후 보 생 (2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해 양 경 찰 청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舊)「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뺑뚱 자동차를 구(舊)「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존속폭행죄
-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 업무상 과실치상죄
- ㉥ 외국사절 모욕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 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실행행위가 착수되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 ②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긴급피난을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적 긴급피난’의 경우 피난자의 정당화된 행위와 위난과 관계없이 침해되는 제3자의 법익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 ④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모두 가능하다.

5.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은 丙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 ㉤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나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②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
-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넘는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경우
- ④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

7.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당한 공격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 甲이 乙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乙의 친구인 丙을 그 차에 감금시키자 丙이 그 차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丙의 자동차 창문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 ③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9. 착오의 <유형>과 <사례>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형>

- A. 법률의 부지
- B. 효력의 착오
- C. 포섭의 착오
- D.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 E.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F. 반전된 사실의 착오

<사 례>

- ㉠ 친구의 개를 허락 없이 죽이더라도 재물손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 ㉡ 지하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소매치기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팔을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병역법」상 입대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 ㉣ 마네킹을 사람으로 오인하고 상해하기 위해 돌로 친 경우
-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한 경우
- ㉥ 강도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인(私人)도 그를 추적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 ① A - ㉠ E - ㉤ F - ㉣
- ② B - ㉡ C - ㉣ D - ㉤
- ③ C - ㉠ E - ㉡ F - ㉣
- ④ D - ㉡ E - ㉤ F - ㉣

10.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영아살해죄
-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위증죄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 업무상동의낙태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 ㉡ 甲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 ㉤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 중립명령위반죄
- ㉣ 도주원조죄
- ㉤ 수도불통죄
- ㉥ 인질강요죄
- ㉦ 특수도주죄
- ㉧ 폭발물사용죄
- ㉨ 일반교통방해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A회사 경리과장 乙의 배임행위를 A회사 직원인 친구 甲이 함께한 경우 甲은 제33조 단서에 의해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15.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 ④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4초간(비동거)일 경우에는 친고죄이다.

16. 공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 이미 흉기휴대 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만 했을 뿐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만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형법」상 임의적 물수의 대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받은 뇌물
- ②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흡식기
- ③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된 유가증권
- ④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3.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3.7. 다시 개정되면서 2010.3.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하나,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 ㉤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무고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신고사실이 진실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 ④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더라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 ㉢ 상습으로 약 4개월 동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이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 ㉣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강제통용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오인할 수 있다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된다.

2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4.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성교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
- ㉣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5.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 ㉡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 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 ㉣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돌보지 않아 사망한 경우 동거남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26.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장 甲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장인(丈人) A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 乙에게 “어떻게 해서든 네 차에 A를 태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A가 총회장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라”고 교사하였고,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사건 당일 집을 나오는 A를 협박하여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A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다.

- ㉠ 만약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달리던 차량을 빠져나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乙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乙은 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 만약 乙이 A를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A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약 1시간동안 도로를 주행하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도주하였다면, 乙은 감금죄와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 ㉢ 감금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에 대해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A가 정신병자인 경우에도 乙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27.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한다.
-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소행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형법」 제310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 ㉣ 명예에 관한 죄 중 모욕죄 이외의 것은 반의사불벌죄이다.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에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 0개      ㉡ 1개      ㉢ 2개      ㉣ 3개

2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검사로부터 필로폰 투약사범으로 지명수배된 자를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권유하여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 ㉡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중이던 甲이 친구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친구에게 요청하여 속칭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29.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 ㉡ 피담보채권의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이외에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③ 피교사자가 교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실현한 경우 교사자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사자는 자신이 교사한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④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31.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사람소리가 들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강도범이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 ㉣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 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강도 미수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甲이 A를 살해한 후 A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 버린 경우, 甲에게는 A의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였다면 내란 선동은 성립하는 것이며,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 ②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그 합의의 실질적인 위험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 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④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3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다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34.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 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③ 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이 보호법익이며 교통방해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가 기수이다.

3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소유의 선박은 과점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여 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더라도 사문서위조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 ㉤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
- ② 법원에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8.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 ③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9.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동거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화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동거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현주 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뇌물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뢰물전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유혹에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
- ㉣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배임수채죄(「형법」 제357조 제1항),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 ㉡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 ㉢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 관할위반판결이 확정된 경우
- ㉤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범죄인지, 자수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 진정·자수·범죄신고·불심검문은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다.
- ㉤ 사법경찰관에게도 범죄인지권, 증거보전청구권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전적 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 ㉣ 자백보강법칙
- ㉤ 형사보상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보석
- ㉧ 진술거부권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서류의 사본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意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의 의사 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
- ③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6.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학교 앞길에서 폭행 등 범행을 한 지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 ㉡ 9시 10분 목욕탕 탈의실에서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9시 35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 ㉤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석허가결정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②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 영장은 실효되지 않는다.
- ③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모두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보석허가결정에서는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8.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 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 ㉤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 ㉥ 대통령 · 국회의원 · 법관 · 검사 · 변호사 · 경찰 · 법원 · 검찰공무원 등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연음란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고소는 무효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 ㉥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1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시청공무원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乙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13.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되지만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소기각은 선고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14. 소년형사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15.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16.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7.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 ③ 교사범, 중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중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적법한 증거보전청구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이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 ㉢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다.
-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 수사단계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 ㉥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②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 ③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④ 배상명령은 유·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면소·공소기각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0.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상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④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1.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
- ㉡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 강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만을 인정한 경우
- ㉢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인정한 경우
- ㉣ 살인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를 인정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2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4.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판단
- ㉡ 진술의 임의성
- ㉢ 외국법규의 존재
-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5.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가족 등의 구속사유 등을 통지 받을 권리
- ㉣ 증거재판주의
-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 ㉥ 일사부재리의 원칙
- ㉦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 ㉧ 형사보상청구권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26.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 ㉡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족하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 ㉣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8.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 ㉡ 피해자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 ㉣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 )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48      ② 49      ③ 50      ④ 53

3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③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인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34. 재심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없다.
- ㉡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 ㉢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
- ㉣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35.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사후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사인에게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6.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 ㉡ 절도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증언은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 ㉢ 증거방법과 증거자료를 구분할 때, 상해진단서·증거물인 서면·증인의 증언은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 ㉣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구분은 증거법정주의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항소이유서 부분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3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9.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피선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③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40.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甲은 2010.12.8.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丙의 사무장인 乙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乙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乙은 인적 사항만을 진술한 후 丙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丙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乙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乙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사 甲은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 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乙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 ① 甲은 검사로서 乙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②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므로 乙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 ③ 甲이 乙을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④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甲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